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의 대일외교 과제 및 전략

교 수 조 양 현

1. 문제의 제기

가. 한국 외교의 제약 요인으로서의 한·일관계

- 박근혜 정부의 출범 이후 2년 동안 한·일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정상회담조차 개최하지 못하는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
 - 과거사와 독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제반 분야로 파급되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음.
- 냉각된 한·일관계는 양국관계는 물론 우리의 통일외교와 지역·다자외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여, 한국 외교의 전략 공간을 제약하고 있음.
 - 한·일관계 악화는 북한 핵 문제의 해결과 통일(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지역구상(동북아평화협력구상)의 추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한·일 간 긴장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다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해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목 차>

1. 문제의 제기
2. 한·일관계 현주소 및 대일 접근법
3. 2015년 한·일관계 주요 현안 및 대응방안
4. 고려사항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에 해당하는
2015년은,
한국은 해방과
분단 70주년,
일본은 종전
70주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과거 인식을 둘러싼
한·일 갈등이
우려되는 시기...

- 전통적으로 안정적인 한·일관계는 한·미관계와 함께 우리 외교·안보의 지지기반이었고, 한·미·일 3국 간의 우호협력관계는 국제환경 변화라는 높은 ‘파고(波高)’에서 한국의 국익을 지켜내는 ‘댕’으로서 기능해 왔음.
- 한·일관계 악화는 동아시아 국제관계가 미·중 양국을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역내 세력에 의한 지역 질서 안정화 기제의 구축을 제약하고 있음.
- 역내 국가들에 미·중의 움직임이 상호 배타적이거나 지역 국가들에 불편한 것이 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이해관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일 간의 역사화해를 통한 전략적 협력관계가 불가결함.

나.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의 위기 요인

-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에 해당하는 2015년은 과거사 및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 간의 긴장이 우려되는 시기임.
- 한·일 간 현안인 위안부 문제 외에 2월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 3월의 교과서 검증, 4~5월의 집단적 자위권 관련 법안 및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 8월에 예상되는 종전 70주년 기념 담화 등 일본 내 움직임이 우리 국민감정을 자극할 수 있음.
- 한·일 기본조약이 조인된 6월을 전후하여 한국의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및 정계를 중심으로 각종 관련 행사가 기획 중이며, 이를 계기로 해방 후 한·일관계의 토대인 동 조약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이 가시화할 수 있음.
- 일본군 위안부, 징용 피해자 등 1965년 한·일 기본조약으로 해결되지 못한 과거사 관련 문제가 재부상하고 동 조약의 재개정 논의가 확산될 경우, 한·일 갈등이 심화되고 우리 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 2015년은 한국은 해방과 분단 70주년, 일본은 종전 70주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과거 인식을 둘러싼 한·일 갈등이 우려되는 시기임.
- 탈냉전 이후 두드러지는 일본 사회의 총체적 보수화 현상을 고려한다면, 일제의 식민지배 및 침략에 대한 한·일 간 역사인식의

차이가 부각될 가능성이 큼.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종전 70주년 기념 담화에 대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담화에 역사수정주의적 요소가 포함될 경우 한·일관계의 새로운 분쟁요인이 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고에서는 한·일관계의 현주소에 대한 진단을 바탕으로 대일외교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2005년 한·일관계의 주요 갈등 요인 및 대응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함.

2. 한·일관계 현주소 및 대일 접근법

가. 과거사를 둘러싼 관계 악화

-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은 한·일관계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는 과거사를 둘러싸고 전략적으로 상호 부채(負債)가 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제로·섬 내지는 마이너스·섬의 관계에 있음.
 -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성의 있는 조치를 일관되게 요구해 온 반면, 일본 정부는 일본 측의 강제 동원을 보여주는 증거가 없으며, 위안부 문제는 이미 한·일 기본조약으로 해결이 끝난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 2014년 이후 양국 외교당국 간에 6회의 국장급 회담이 있었지만,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함.
- 한·일관계의 핵심 현안인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는 2014년 6월에 고노 담화의 검증 결과와 함께 동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발표함. 하지만 한국 여론은 일본 정부의 검증이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부정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으로, 고노 담화의 유명무실화를 기도하고 있다고 비판함.
 - 일본 정부의 검증 작업은 위안부의 모집과 운영 등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본질적인 사실관계보다 담화의 작성 경위에 비중을 두었고,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의 내용이 한·일 간의 외교교섭 결과물임을 강하게 암시하는 결과가 발표됨.

한·일관계는
과거사를 둘러싸고
전략적으로
상호 부채(負債)가
되고 있다는 의미에서
제로·섬 내지는
마이너스·섬의
관계...

한·일 기본조약에
기초하여
한·일관계를
관리하던
‘65년 체제’가
시대적 한계에
직면...

- 한국의 대(對)일 태도는 전에 없이 냉각되고 일본에서는 반한(反韓) 감정이 확산되고 있어, 양국 정부 간의 과거사 화해를 한층 더 어렵게 하고 있음.
- 2013년 말의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2014년에 들어서의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 8월 이후의 아사히(朝日)신문의 위안부 관련 보도 정정(訂正)에 대한 일본 내의 비판 고조, 10월의 산케이(産經)신문 전 서울 지국장의 기소 문제 등으로 양국 관계는 경색됨.
- 최근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거의 북한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짐(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 조사에서는 한국에 친밀감을 느낀다는 응답은 2012년 62%에서 2014년 40%로 급감한 반면, 친밀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응답은 35%에서 59%로 급증함(일본 내각부 조사). 일본에서 혐한론(嫌韓論)이 우익세력이나 일부 보수정치가들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체에 침투하기 시작하였고, “한국을 때리는” 상업적 서적들이 줄을 잇고 있음.
- 양국 간의 과거사 갈등은 외교 마찰을 넘어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 파급되어 투자와 교류를 위축시켰고, 한·일 간 상호인식이 악화된 상황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정치적 비용은 증가하고 있음.

나. 한·일관계의 구조변화

- 거시적으로 볼 때, 한·일관계가 과거사를 둘러싸고 냉각된 것은 그동안 양국 정부가 1965년의 한·일 기본조약에 기초하여 한·일관계를 관리하던 이른바 ‘65년 체제’가 시대적 한계에 직면했음을 의미함.
- 1990년대 이후 한·일관계는 ‘냉탕-온탕’의 사이클이 반복되어 왔는데, 그 과정에서 양국 간에 상호 배려가 사라지고 과거사와 독도 문제를 축으로 대결 구도가 선명해짐.
- 과거사와 영토 문제의 입장 차이를 간직한 채 안보와 경제 논리를 우선하여 타결된 한·일회담은 냉전기를 통해 한반도 안정화 및 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했지만, 이제는 과거사 문제가 오히려 한·일관계의 핵심 쟁점으로 등장하여 양국 관계

전반을 구속하고 있음.

- 탈냉전 이후 한·일관계의 대결 구도가 선명해진 배경에는 냉전 종결에 따른 한·일 간 안보연대감의 약화, 일본 사회의 보수화와 외교 문제의 정치 쟁점화, 한국의 민주화와 비정부 주체의 영향력 증대 등이 있음.
 - 한·일관계는 △관계의 대등화(상대적 국력 차이 축소), △체제의 균질화(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공유), △주체의 다양화(비정부 주체의 역할 증대), △교류의 다면화(민간교류, 문화교류의 확대) 등의 구조적 변화를 겪음.
- 한·일관계의 악화에 따른 ‘외교의 정치화’는 외교당국의 역할 한계 및 외교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함.
 - 한·일 간의 과거사·독도 문제가 양국 국내 정치의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한·일관계에서 외교부와 외무성의 역할이 주변화하고, 외교활동의 기회비용이 증가함.
 - 일본 정계에서 ‘강한 외교’를 외치는 전후 세대 보수 정치가들이 주류로 등장하고, 역사수정주의와 영토민족주의가 노골화되면서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기본으로 하던 일본의 대외 태도가 바뀌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외교의 기초였던 ‘정경분리원칙’이 훼손됨.
 - 이명박 정부 시기의 촛불집회, 위안부 문제, 한·일 정보협력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한국에서는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과 NGO의 영향력이 커지고 사법 판단(2011년 8월 헌법재판소 판결, 2012년 5월 대법원 판결)이 개입하면서 외교 당국의 한·일관계 관리 능력이 크게 약화됨.
 - 한·일 양국 간에 과거사·독도 문제 대응에 과도한 외교자원이 투입되고, 대외 교섭보다 국내 정치과정에 더 많은 외교 자원이 소모되는 악순환이 구조화됨.

‘외교의 정치화’는
외교당국의
역할 한계 및
외교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

다. 대일외교 접근법

(1) 장·단기 2트랙 접근

- 한·일관계가 구조적 전환기에 있다면, 2015년 대일외교에는 과거사 갈등의 악화를 방지하는 관리 노력과 함께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일 전략의 재구축 작업이 병행되어야 함.

- 2015년의 실천적 의미는 우선 한·일관계 악화의 근인(近因)인 위안부 문제의 해결 및 과거사 화해를 위해 지도자 간의 소통을 도모하고, 양국 언론의 과도한 자극성 보도를 자제하는 데 있음.
- 동시에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의 거시적 의미는, 한국의 대외 구상이라는 전략적 관점에서 대일정책을 재검토하고, 그 속에서 과거사의 프레임을 극복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는 데서 찾을 수 있음.

(2) '분리 대응' 기조의 견지

-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시점에서의 과거사 문제의 민감성과 폭발력을 충분히 주지하여 위안부, 징용피해자, 독도 문제와 기타 현안의 분리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외교 당국 간 공방을 가능한 자제함으로써 기회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경제와 안보 등의 현안에서 한·일 간에 원활한 소통이 안 될 경우 양국 모두가 피해를 보는 구도인바, 과거사나 독도 관련 마찰이 발생하더라도 그 영향이 타 분야로 파급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분리 대응'이 중요함.
- 과거사와 관련하여 한·일 중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양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 근본적인 해결에 집착하는 원칙론이나 문제를 방치한 채 기능 협력만을 강조하는 접근법은 비현실적임.
-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일 압박을 유지하면서 독도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의 도발 수위에 상응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임.

(3) 과거사 화해를 위한 공공외교 강화

- 외교당국이 한·일관계 전체를 주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을 버리고, 역사인식의 공유라는 '완치'를 위한 장기 처방 관련 인식 공유와 비전 도출을 유도하는 노력이 요구됨.
- 과거사 문제의 대응에 있어서는 '재발·악화 방지'를 위한 관리 차원의 노력과 역사인식의 공유라는 '완치'를 위한 장기 처방을 병행하여야 함.
- 국내적으로 위안부·독도 문제 관련 전문가, NGO, 이해 당사자를

과거사 문제와
기타 현안의
분리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외교 당국 간 공방을
가능한 자제해야...

중심으로 논의의 장을 제공하여 사회적 합의를 유도해야 함.

- 일본 사회의 양심 세력과 연대하여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과거사 반성과 화해가 세계적 대세이며, 역사 왜곡이 일본의 국제적 역할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환기시켜 나가야 함.

한·일
양국 정상 간의
회의가 어렵더라도
양국관계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이 중요...

3. 2015년 한·일관계 주요 현안 및 대응방안

가. 한·일관계 정상화

- 위안부 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양국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못하고 정부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노 담화 검증 등으로 외교 당국 간 신뢰관계가 타격을 받은 상황임.
 - 작년 참의원 선거를 통해 아베 내각은 향후 최장 4년간의 정권 연장에 성공한바, 박근혜 정부는 남은 3년간의 임기 동안 아베 내각을 상대로 대일외교를 펼치게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양국 간의 신뢰회복이 절실함.
- 한·일 간의 정치적 신뢰관계 복원을 위해서는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떠나 양국관계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함(‘정상회담 없는 정상화’).
 - 이를 위해서는 한·일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 간의 신뢰관계 회복 및 협의 채널 제도화 차원에서 각료회의 정례화, 차관급 전략대화 강화, 비공식 대화 등 다양한 대화 채널을 활성화하여 한·일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함.
 - 신세대 정치인 교류 강화, 한·일 의원연맹, 한·일 협력위원회, 한·일 유식자 회의, 지방자치단체, 경제계, 민간 차원의 다양한 기념행사 등도 한·일관계의 안정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임.
- 한·일 간 정상회의 부재(不在) 상황에서 한·중·일 협력 틀이 대안으로서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음.
 - 지난 2년간 개최되지 못한 한·중·일 정상회의가 성사된다면, 과거사와 관련하여 우리의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한·일 정상 간에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는 적극적인 의미 부여가 가능함.

나. 한·일 기본조약 50주년 문제

-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과 관련된 각종 행사를 통해 양국 관계가 긴장 상태에 놓일 수 있으며, 특히 2·22 ‘다케시마의 날’, 3·1절, 6·22 한·일 기본조약 조인일, 8·15 광복절 등을 전후해서 한·일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과거사 청산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하고 공동 행동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음.
 - 각종 학술 세미나가 개최되어 한·일 기본조약의 한계에 대한 외교사 및 국제법적인 재조명, 개인 피해자 보상 문제의 재부상, 동 조약의 개정 요구, 한·일 국교정상화의 공과에 대한 논쟁이 촉발될 수 있음.
- 정부가 전면에서 나서 한·일 간의 새로운 행사를 기획하기보다는, 50년 전에 험난한 상황에서 이루어 낸 국교정상화의 교훈을 되살려 과거사 화해의 실마리를 찾는다는 취지에서 학계, 전문가, 민간단체의 행사를 지원하는 것이 무난할 것임.
 - 한·일 공동의 1.5트랙 위원회(가칭 ‘한·일관계 비전그룹’ 혹은 ‘한·일 역사화해위원회’) 설립안(한·일이 공유할 수 있는 중장기 미래비전을 마련하기 위해 양국의 정치인, 전직 외교 관료, 전문가, NGO, 사법인, 언론인 등으로 역사화해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보고서를 한·일 미래비전의 청사진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같은 기존 논의를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음.

과거사 화해의
실마리를 찾는다는
취지에서
학계, 전문가,
민간단체의 행사를
지원...

다. 과거사(위안부, 아베 담화 등)

- 2011년 한국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래 위안부 문제가 우리 대일 외교의 최우선 현안이었지만, 위안부 관련 일본 사회의 퇴행적 움직임과 일본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해결이 불투명한 상황임.
 - 우리 정부는 위안부 문제는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잔존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일본 측은 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되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으며, 도의적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임.

- 조속한 정상회담의 실현을 통해 기존 일본의 역사인식 및 담화의 계승과 위안부 및 징용자 보상 문제의 해결 원칙에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 실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위안부 문제와 기타 현안의 분리 대응이 현실적인 대안임.
 - 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입법에 의한 해결, 중재위 구성에 의한 해결, 재단·법인 설립에 의한 해결 방식 등에 비해 외교협상에 의한 정치적 해결이 가장 현실적인바,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에 대한 한·일 간의 입장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이 절실함.
- 외교 당국 간의 협의와 병행하여 한·일 양국의 국내 정치적 프로세스를 통한 컨센서스 형성과 최고지도자의 정치적 결단이 불가결함.
 - 정부·언론·학계와 피해자 관련 단체 간의 대화를 통한 공동 노력을 통해 위안부 문제의 현실적인 해결방안과 대일 요구 수준에 대한 국내적 합의 도출이 요구됨.
 - 일본 정치·사회의 총체적 보수화로 인해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일본 측의 전향적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시 성범죄 및 여성 인권침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국제 인권단체와의 연계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공감대 확산 노력이 중요함.
- 그동안 한·일 과거사 문제에 개입을 자제하던 미국 정부는 2015년에는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를 정리하라는 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최대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양호하지 못할 경우, 한·미·일 공조가 약화되어 북한 핵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하거나, 최근 한·미·일 연대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역사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중국에 어부지리를 안겨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 미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역사인식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쟁 성범죄 내지는 여성 인권 문제 차원에서 접근하여, 이 문제에 관한 한 일본 정부가 전향적으로 양보하고, 한국은 일본 정부의 역사 화해 노력에 유화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양국 관계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보임.
- 오는 8월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아베 총리의 종전 70주년 기념 담화에서 침략과 사죄의 요소가 회석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아베 총리의
종전 70주년 기념
담화와 관련,
국제사회를 활용하여
아베 내각의
역사수정주의 행태를
견제...

일본의 지역적
안보 역할 확대 및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과 관련된
한·일 간의
입장 차이가
한·일관계의 갈등
요인...

미국 등 국제사회를 활용하여 아베 내각의 역사수정주의 행태에 대한 선제적 견제가 필요함.

- 아베 총리는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종전 70주년 총리 담화에 △과거 전쟁에 대한 반성, △전후 평화 국가로서의 행보, △국제 사회에 대한 공헌 등을 담겠다고 언급하고, 무라야마 담화를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밝힘.
-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뒤따르지 않는 한·미·일 공조의 공허함을 주지시켜 미국 등 국제사회가 일본에 대해 압력을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임.

라. 안보(집단적 자위권, 안보협력, 대북 공조 등)

- 2015년에는 아베 총리가 지향하는 ‘강한 일본 만들기’ 차원에서 일본의 방위력 정비, 집단적 자위권 관련 법제화, 미·일 방위협력 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등이 가속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의 지역적 안보 역할 확대 및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과 관련된 한·일 간의 입장 차이가 한·일관계의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음.
 - 탈냉전 이후 일본은 미·일동맹 강화, 독자적인 방위력 확충, 자위대의 활동 범위 확대를 통해 적극적인 군사·안보 역할을 추구해온바,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이후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개념하에 세계 각국 및 지역예의 접근을 강화하는 전략외교의 성격을 강화하고 있음.
 - 한·일관계가 냉각된 상황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 및 한·일 간의 안보협력에 대해서는 한국 내에 부정적인 여론이 강해, 안보협력을 둘러싼 한·일 갈등이 존재함.
- 미·중·일 간의 전략적 경쟁 관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해 미국 주도의 안보연대에 참여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경우, 주변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통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확보하고자 하는 한국에 큰 도전이 될 수 있음.
 - 오바마 정부는 재정적 압박하에서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에서 호주, 인도, 동남아 국가들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음.
 - 최근 미국의 싱크탱크는 미국이 역내 파트너 국가들과 공동의

전략하에 공동 장비구매, 수출통제, 법적 제도화 등을 포함한 군사적 대응능력을 기르는 것이 미국은 물론 역내 국가들의 전략목표에 부응한다고 보고, ‘연합방위(federated defense)’의 개념을 제시함.¹⁾

- 최근 미국 의회가 국방수권법을 확정하되, 국방성이 한·미·일 3국 간의 MD(Missile Defense, 미사일 방어) 협력 강화 관련 한국의 협력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음.
- 지난 12월의 한·미·일 3국 간 ‘북한 핵·미사일 위협 정보공유 약정’ 체결에서 알 수 있듯이, 향후 한·일 간의 안보협력 확대에 대한 미국의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바, 국내의 부정적인 여론을 참작한 점진적인 접근이 현실적임.
- 당분간 북한에 대한 정보 공유 외에, 한·일 간 국방안보 분야의 인적·정보교류의 확대와 함께 해상 재난 시의 긴급 구조 협력, 대테러·해적 행위에 대한 공동 대응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다자·지역적 협력에 한정하는 것이 무난함.

4. 고려사항

가. 중장기 대일정책의 재정립

- 동아시아 정세가 급변하고 국익과 지정학 등 현실주의적 국제관계관이 힘을 얻어가는 상황에서, 전략외교의 관점에서 대일외교를 재구축할 필요가 있음.
- 한·일관계를 규율하던 ‘1965년 체제’의 한계가 지적되고 일본 사회의 역사수정주의가 한층 노골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의 대외 관계에서 일본을 제약 요인이 아니라 기회 요인으로 활용하기 위해 어떠한 접근이 필요한지, 과거사 프레임을 넘어서 한·일 관계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한·일 양국이 ‘보통의 국가관계’에서 상호의 전략적 가치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미래의’ 시점 공유, ‘양자에서 다자

전략외교의 관점에서
대일외교를
재구축...

1) Michael Green, Kathleen H. Hicks and Zack Cooper, “Federated Defense in Asia,” CSIS, December 2014.

로의' 관계 전환, '정부 주도에서 시민사회로의' 주체의 다양화 등을 포함하는 발상 전환이 필요함.

나. 한·미·일 공조와 한·중·일 협력의 병행

- 2015년에 위안부 화해 및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는 그 보완적 기능이 기대되며, 중장기적으로 한·중·일 협력과 한·미·일 협력을 병행하여 균형 잡힌 소다자주의를 추구해야 함.
 - 한·중·일 정상회의는 중국 측 대응이 관건인바, 한국이 주최국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보임으로써 중·일관계 개선의 중재자적 역할에 충실하고 중·일 양국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음.
 - 한·미·일 공조를 통해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안정을 위한 3국 협력을 강화하고, 북·일관계 진전 및 미·북관계 전개에 대비할 수 있음.

한·중·일 정상회의는
한국이 주최국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보여야...

다. 대일 안보 선택지로서의 한·미동맹

- 일본의 헌법 개정이나 집단적 자위권 등의 문제에 대한 한·일 간의 인식 차이가 존재하고 한국의 영향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대비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음.
 - 미국은 미·일 동맹체제하에서의 일본의 방위력 증강을 원하지만, 일본이 미·일동맹의 틀을 넘어 독자적인 군사대국화로 나아가는 것은 경계하고 있는바, 한·미동맹의 강화를 통해 미·일동맹의 대일 견제적 성격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미국의 대일 영향력을 감안할 때, 최근 격화되고 있는 동아시아 역사·영토 논쟁과 관련해서도 한·미동맹은 일본의 과도한 우경화를 견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라. 대미 공공외교 및 인적 네트워크 강화

-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의 압력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뒤따르지 않는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의 위험성에 대한 국제 홍보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미국 내 지한파 인사 육성 등을 통해 한·미 간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야 함.

- 일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역사문제에 대한 집착이 오바마 정부의 재균형 정책의 핵심축인 한·미·일 공조를 이완시켰다는 논리로 미국 정부를 공략하고 있음.
- 한국은 올바른 역사인식이 없는 한·미·일 협력의 공허함과 함께, 일본의 역사수정주의가 심화될 경우 지역 질서의 불안정은 물론 미·일관계 악화 역시 피할 수 없음을 주지시켜야 함.
- 일본의 과도한 우경화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 미국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 내 오피니언 리더 중에 지한파 인사를 육성해야 함.

2015. 1. 30

토 론 : 동북아시아국 심의관 정병원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진창수

아시아태평양연구부장 이원우

편 집 : 연 구 원 김새들